OECD 會議參席 및 獨逸統一現況視察 結果報告

《 目　　次 》

1. 一 般 事 項 ····· 1

2. OECD 獨逸經濟 檢討會議 ····· 2

가. OECD 概要 ····· 2

나. 獨逸經濟 檢討會議 內容 ····· 3

3. 獨逸統一 現況視察 및 評價 ····· 7

4. 체코·슬로바키아 分離獨立 現況 ····· 17

5. 建 議 事 項 ····· 20

첨 부 : 獨逸統一問題 現況 ····· 23

1. 一 般 事 項

가. 出 張 者 : 朴 聖 勳 (統一政策室 第2政策官)

나. 出張期間 : 1993. 6. 7(월) ~ 6.18(금)

다. 出張地域 : 프랑스(파리), 독일(본, 베를린), 체코(프라하)

라. 出張目的 :

o OECD 『통일이후의 독일경제 검토회의』 참석

o 독일통일 현황 시찰

o 駐獨 統一硏究官 업무조정문제 토의

o 체코·슬로바키아 분단관리 현황 시찰

마. 主要日程

일 자	주 요 일 정
93.6.7 - 6.9 (파리)	o OECD 경제개발검토위원회(Economic and Development Review Committee) 『독일경제검토회의』 참석
93.6.10-6.12 (본)	o 독일내무부 산하 『연방정치교육센터』 아시아 담당자 Cristoph Mueller - Hofstede 면담 o 주독대사관 통일문제전문가(염돈재공사 등) 간담회

일 자	주 요 일 정
	o 주독통일연구관 업무 및 주재지역 조정문제 토의
93.6.13-6.15 (베를린)	o 동·서 베를린 및 동독지역 재건 현황시찰 * 신창섭 MBC 베를린 특파원과 동행취재
93.6.16-6.17 (프라하)	o 체코 외무부 슬로바키아담당국장 Vilem Holan 박사 면담 o 텔레진수용소(反나치 정치범수용소) 시찰

2.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獨逸經濟 檢討會議

가. 經濟協力開發機構 概要

o 名 稱 : Organization for Economic and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 設 立 : 1961. 9.30

o 會員國 : 영국, 독일, 불란서, 벨기에, 룩셈부르크, 화란,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덴마크, 아일랜드 (이상 EC 제국),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이상 EFTA 제국),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란드, 터어키

o 事務總長: Jean-Claude PAYE(장 끌로드 페이예)

o 目 的 : ① 경제성장 촉진
② 후진국 원조
③ 세계무역 확대

o 性　格 : ① 소수 회원국간의 클럽적 성격
② 표결에 의하지 않은 자율적인 의견수렴방식 선호
③ 선진공업국간 경제정책 협의 및 조정담당

o 組　織 :- 이사회(최고의사 결정기관), 집행위원회 산하에 약 200여개의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으로 구성

-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3인) 산하에 약 1,800명의 전문직원 보유

o 世界經濟上 比重(89년 기준) :

- 총 GNP는 14.4조$로 전세계의 2/3
- 총수출(2.13조$) 및 총수입(2.21조$)은 전세계의 3/4 점유

o 韓國의 加入問題 :

- 92.4 한국외무장관 명의 공식서한을 통해 7차 5개년계획 기간중 (90년대 중반기)에 OECD 가입의사 공식 표명

- 93.6 OECD 각료이사회,한국의 OECD 가입을 환영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하여 발표

나. 獨逸經濟 檢討會議 內容

OECD 산하의 『경제개발검토위원회』 (Economic and Development Review Committee)는 93년 6월 9일 오전·오후에 걸쳐 전 회원국(24개국) 대표 참석하에 『통일이후의 독일경제상황을 검토하는 연례회의』(Annual Review of Germany)를 비공개로 개최함.
먼저 독일정부대표단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국 대표의 토론으로 진행됨.

< 獨逸政府代表團 名單 >

Mr. A. Dick	Director Head of the Economic Policy Directorate,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Mr. K. Broehl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Mr. H. Suesser	〃
Mr. G. Thunann	〃
Mr. H. Wuerzburg	〃
Mr. W. Merz	Federal Ministry of Finance
Mr. W. Friedmann	Deutsche Bundes Bank
Mr. C. Hofmann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Mr. M. Graf von Matuschka	Ambassador
Mr. M. Baron	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Mr. E. Wallenwein	Permanant Delegation
Mr. E. Kohlmann	〃

< 主要 發表內容 >

① 現 獨逸經濟의 趨勢와 政策 :

o 1987-1989년의 경제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후에 서독경제는 1992년 중반부터 후퇴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후 최악의 상황에 있음. 동구지역의 자립재건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고 서독지역도 금년도 경제성장 가능성은 매우 적음. 당면문제는

- 기업투자를 시급히 다시 부양시키는 문제
- 외국수요를 시급히 증가시키는 문제
-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문제

② 인플레 展望과 貨幣政策 :

o 통화량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高인플레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인플레를 다스릴 통화감축의 범위는?

③ 獨逸마르크貨는 統一以後에 더이상 유럽 통화의 基準通貨 役割을 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음. 관련 當面問題는

- 더이상 마르크貨의 基準通貨 역할이 옳은 것인가?
- 작년 9월이후 외환시장의 혼란상황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④ 財政政策 :

o 엄청난 통일비용은 최근 몇년간 부채로 남고 말았음.
이제 이 비용은 재고되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음.

⑤ 財政統合과 東獨地域 景氣浮揚 問題 :

o 재정정책의 핵심문제는 지원예산 절감이 이뤄질 경우에도 상호 신뢰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의 문제임.

⑥ 東獨地域의 再建問題 :

o 서독지역을 뒤따르는 동독의 재건속도가 너무나 느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개선 필요성은 대단히 높으나 이에 대한 실제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임.

⑦ 私的 投資率을 높이기 위하여 賃金改善은 기술발전 趨勢와 生産性 水準에 맞춰 이뤄져야 함.

< 討論要旨 >

o 獨逸政府 經濟部處 代表들은 한결같이 統一後 獨逸經濟 상황을 비관적 입장에서 보고하고, 특히 마르크貨가 유럽의 基準通貨로서의 역할을 더이상 못할 지경이라는 것과, 對外通貨 換率調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o 이에 대해 이태리·불란서·캐나다 등 회원국 대표들은 대체로

- 현재의 경기후퇴는 비단 統一後遺症을 가진 독일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全世界的인 經濟의 後退現象일 뿐이며, 마르크貨의 對外換率 조정은 불필요하며, 西獨側이 너무 엄살을 피우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분위기였음.

※ 실제로 많은 獨逸問題 專門家들의 견해에 따르면, 오늘의 獨逸經濟는 과거 西獨의 安定的 成長期와 비교해 볼 때 약간 후퇴한 정도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고 함. 단지 中·長期 經濟安定 展望이 不透明하다는 점 때문에 政府 關係當局 專門家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함.

3. 獨逸統一 現況視察 및 評價

가. 獨逸內務部 傘下 聯邦政治敎育센터 아시아담당자 면담

o 일시 : 1993. 6.11, 10:30-12:00

o 장소 : 독일연방정치교육센터(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아시아局

* 주소: Stadtwaldguertel 42, 5000 Koeln 41
전화: (0221) 40 30 91-93

o 면담자 : Christoph Mueller - Hofstede(아시아局長)

o 최근 약 1개월전 쾰른市에서 열린 韓·獨 統一問題 比較세미나는 대단히 유익했음.

- 세미나의 결론으로서, 한국통일문제는 독일통일과는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통일모델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음.

o 聯邦政治敎育센터는 內務部 傘下機關으로서 지난 1952년에 설립 되었음.

- 설립당시, 서독은 지난 정치역사에서 바이마르共和國의 실패, 나치와 공산주의 독재정치 경험, 특히 히틀러 제3국의 독재를 겪고난 후였기 때문에, 서독 국민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할 정치 과제가 대두되고 있었음.

- 현재 Bonn에 본부를 두고 23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시아局은 20명이 근무중임.
내무부로부터 연간 8,000만 DM의 예산을 받아 집행하고 있음.

-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주요역할은 National Information Center로서 국민들을 상대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각종 정치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서적·자료 제공, 학술세미나 개최 등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주로 러시아 등 동유럽국가들의 발전상황, 유럽 통합실태 등 국제관계에 관한 정보 또는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관한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o 동독지역에는 따로 州別로 政治敎育센터(Landes Centralle fuer Politische Bildung)가 있으며, 各級 勞組, 企業人聯盟, 敎會機關 등 社會組織들을 통해 동독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음.

o 統一問題는 고도의 政治問題이기 때문에, 經濟發展計劃을 수립하듯이 단계적인 정책 설정과 집행이 곤란함.

- 예를들면, 89년말 콜총리가 『3단계 10개항 통일방안』을 제시, 연합→연방→통일의 단계적 추진방침을 내놓았지만, 불과 몇개월만에 동·서독 경제통합을 전격 실시하고 뒤이어 급격한 정치통합이 이루어지는 등 당초의 단계적 설정이 무색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음.

나. 駐獨大使館 統一問題專門家 懇談會

o 일시 : 1993. 6.11, 12:00-14:30

o 장소 : 한국음식점(Bonn)

o 참석 : 염돈재公使, 제2정책관,
주독통일연구관 (신덕수, 조용남, 양창석) 등

<1989년 베를린障壁 崩壞時 東獨指導部의 示威鎭壓 抛棄 背景>

o 당시 東獨指導部는 점차 다가오는 政治的 危機를 예감하고 진압군 편성 및 비상대기, 앰블런스 준비 등 民衆示威 鎭壓을 위한 사전준비 조치를 취하였음.

그러나 CCTV 모니터를 통해 나타나는 示威熱氣는 훈련이 부족하고 사기저하된 鎭壓兵力으로는 도저히 성공적 진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고, 시위에 밀려 불가피하게 民主總選을 한다 해도 기득권있는 共産黨指導部가 쉽사리 패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鎭壓抛棄를 선택하도록 작용하였음.

동독의 대다수 국민들도 동독지도부가 민주총선 패배를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함.

o 또한 障壁崩壞 1개월전 10월초에 東獨 建國紀念行事 참석차 동베를린을 방문한 고르바쵸프 蘇聯大統領이 기자회견에서 『늦게 오는 者는 神의 罰을 받을 것이다』(빨리 개혁을 선택하라는 뜻)라는 발언과 東獨黨 政治局會議에서 『만약의 危機 事態時에도 駐東獨 蘇聯軍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방침통고는 동독지도부에게 시위진압 포기를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獨逸統一은 과연 잘된 것인가?>

o 역사적으로 獨逸國家는 오랫동안 聯邦形態를 취해왔으며, 西獨內에서도 각 州마다 역사와 문화의 지방색이 다르고 경제적 소득수준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東西獨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는 어느정도 獨逸國民들의 歷史文化와 정서에 용납될 수 있는 것임.

o 원래 통일을 추진한 西獨國民들의 동기는 Humanism에서 비롯된 것인바, 2차대전후 잘못된 制度와 政治를 강요받음으로써 自由와 福祉를 희생당하고 있는 東獨兄弟들을 빨리 구원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 바탕을 둔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몇가지 경제적 어려움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임.

o 실업, 인플레, 세금부담증가 등 統一後遺症에도 불구하고, 『獨逸統一에 문제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西獨地域 대다수 국민들은 『글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음.

피부로 느끼는 서독 지역의 國民經濟 상황은 그다지 심각한 위기에 있는 것 같지는 않으며, 다만 聯邦政府의 經濟部處 專門家들이 『불투명한 經濟展望』을 걱정하고 있고, 일부 저널리즘이 過剩 報道를 하고 있는 것임.
대다수 동독지역 국민들도 역시 『統一以前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음.

<統一過程에서의 西獨政府의 政策的 오류에 대한 評價>

o 현재 나타나고 있는 統一後遺症의 원인에 대해 많은 專門家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음.

① 1:1 비율의 동·서독 화폐통합(동독화폐 및 경제에 대한 과잉 평가)

② 동독지역 소유권 반환원칙

③ 동독지역에 서독의 법과 제도를 무리하게 이식·적용

o 그러나 ①의 선택은 당시 西獨政府 指導者들의 대단히 현명한 역사 의식과 政治的 식견이 내포되어 있다는 긍정적 評價가 내려지고 있음.

- 『통합에 따른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국가는 영원하다』는 명제하에 동독주민들을 1:1로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기본이념을 보여줌으로써, 유럽의 국제사회와 동독 국민들에게 통합의 정통성과 신뢰감을 획득할 수 있었고,

- 당시에 동독국민들이 열망하는 마르크貨를 손에 쥐어 줌으로써 동독주민의 대거 移住를 정지시킬 수 있었음.

(동독지역의 空洞化는 장차 동독지역의 개발을 담당할 주요역군을 상실하는 것이어서 통일후의 동·서독지역 균형을 위협하게 될 요소였음)

o ②의 경우, 西獨指導部에서 소유권 반환 원칙을 결정한 것은, 원래 서독이 가진 강점이 自由民主主義와 資本主義를 신봉함으로써 누리는

- 自由와 福祉

- 市場經濟制度

- 所有權 不可侵의 제원칙들을, 아무리 혁명적 상황에서라도 일단 존중하자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음.

- 역시 『統合의 苦痛은 짧으나, 國家는 永遠하다』는 명제를 존중하고 개인의 소유권을 신성시하는 것은 주변국들을 안심시킬 뿐 아니라, 장차 獨逸統一 過程에 대한 정통성 시비 가능성을 불식시키는 현명한 판단에 따른 것이었음. 정의와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정치적 결단은 오류를 범한다는 서독지도부의 역사의식에 따른 판단이었음.

o ③의 경우, 統獨條約 II (정치통합조약) 附屬議定書를 보면 서독이 일방적으로 동독지역에 서독측의 法과 制度를 성급하게 이식시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

- 부속의정서의 내용에는 東·西獨 政治統合時에 제기될 각종 法과 制度의 상충요소들을 예견하고, 완전한 제도 통일시까지는 동독의 일부 법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예외적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음. 이 역시 서독측의 현명하고 치밀한 統合推進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임.

<東西獨 軍事統合에 대한 中間評價>

o 통일당시 東獨軍隊 규모는 17만 정도였음.
이중에 9만정도는 이미 도주하였고, 나머지 8-9만명의 군대중 將軍級은 전원 퇴역조치하고, 영관급 이상도 원칙적으로 퇴역(대령 1인 잔존) 하되, 將校職級중 특수 기술직 및 필수요원만 잔류시켰음. 직업하사관은 잔존하되, 사병은 해체함. 따라서 동독군대는 사실상 해체된 셈이며, 남아있는 동독군인들도 중요 정보부서에는 배제되어 있음.

o 동독출신 군인의 봉급은 서독군인 봉급의 60%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약 80%정도를 받고 있으며, 95년까지 동등하게 조정될 예정임.

o 東獨武器는 해체하고 있으나, 해체비용이 많이 들어 (예를 들면, 동독의 탱크 3,000대를 해체하는데, 대당 10만 마르크가 소요됨) 년차적으로 推進중에 있고, 일부 유용한 新武器는 국외에 판매하고 있음.

o 東·西獨 軍統合은 대체로 무난하게 잘 된 것으로 평가됨.

<北韓과 東獨의 比較>

o 東·西獨 분단이후 동독측에서 서독측에 방출한 反體制的 인사는 375만명에 달함. 말하자면 동독내에는 반체제인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반체제세력이 강력할 수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民衆蜂起에 따라 東獨體制가 붕괴한 것은 원천적으로 東獨體制가 붕괴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던 것이며 이에 비해 北韓體制는 거의 반체제운동이 존재할 수 없는 극단적인 『鐵의 組織社會』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북한이 동독처럼 급격한 民衆蜂起에 따라 崩壞할 가능성은 많지 않음.

o 또한 우리의 경우, 北韓을 참여시키든, 封鎖시키든 콘트롤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레버리지는 아직 없다고 봐야 할 것임.

o 북한은 어차피 쉽게 무너질 사회는 아닌바, 동독과 달리 유사시엔 무자비한 流血鎭壓이 예상되며, 장차 그들나름대로 서서히 개방을 추진해 나가면서 전형적인 後進國 開發獨裁 段階를 거쳐 점진적으로 변화해 갈 것으로 보임.

  - 만약 북한에서 동독과 같은 體制崩壞가 일어날 경우, 政治報復과 經濟混亂 등 독일보다 몇배의 混亂이 밀어닥쳐, 통일은 또하나의 民族悲劇을 남기게 될 가능성도 우려됨.

o 따라서 우리의 통일은 북한의 崩壞보다는 단계적 점진적 統一接近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獨逸統一의 特徵>

o 분단국가의 재통일은 엄청난 혁명적 사건임.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 혁명의 문제를 서독은 지극히 법률적인 統合節次를 거쳐 해결하였음. 西獨基本法 23條냐 146條냐의 선택문제에서 시작하여 통합의 모든 절차는 法的 근거에 따랐고, 東獨住民 총선에 의해 수립된 合法政府와의 완전한 합의하에 정통성을 일관성있게 유지한채 추진된 것임.

o 따라서 『無血』이었고, 『迅速』하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독일통합과정에 대한 『正統性』 시비는 일어날 수 없을 것임. 약간의 통합후유증은 통합 『革命』을 치른 뒤의 당연한 결과인 것임.

다. 駐獨統一研究官 業務 및 駐在地域 調整問題 討議

o 일시 : 1993. 6.11, 15:00-16:30

o 장소 : 駐獨大使館 大使執務室

o 참석 : 김태지(駐獨大使), 제2정책관, 통일연구관(신덕수)

o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히 『統合對備計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參考資料는 독일의 統合事例에 대한 현지보고서임. 統一院 統一政策室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보고해 오는 統獨現況報告書를 재편집하여, 정부 각 부처의 『統一過程 研究』 擔當部署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o 獨逸統一過程은 아직도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여, 統獨過程硏究의 중요성은 아직 감소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음.

o 따라서 駐獨統一硏究官 그룹(통일원 파견직원 3인)은 당분간 現地에서의 임무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당원의 在外駐在官 配置計劃 調整 방침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실 것을 상부에 건의드릴 수 있기를 바람.

라. 東·西베를린 및 東獨地域 再建現況 視察

o 일시 : 1993. 6.13 - 6.15
o 지역 : 東·西베를린, 부란덴부르크門, 찰리포인트, 포츠담
* 신창섭 MBC 베를린 특파원과 동행취재

o 1989년 12월중순, 베를린 障壁崩壞(89.11.9) 직후에 보았던 東·西베를린과 금번 방문을 통해 살펴본 東·西 베를린, 그리고 작년 7월에 본 東獨地域(라이프찌히 등)과 금번에 본 東獨지역(포츠담 등)은 외견상 큰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한마디로 東獨地域 주민들의 희망과 차분한 재건열기를 느낄수 있었음.

- 특히 동베를린 지역의 급속한 발전상황은 곳곳의 건축공사와 거리를 뒤덮은 서독제 차량 (과거의 소련제 『라다』나 동독제 『트레비』는 거의 없어짐)의 홍수로 금방 알 수 있었고, 도시지역 전체분위기가 밝게 변화하고 있었음.

- 동독경제의 재건이 기대보다는 더디다고 평가받고는 있으나, 이것은 원래 독일인들이 조급하지 않게 차분히 일을 추진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 찰리포인트 주변은 장벽의 흔적이 완전히 없어졌고, 東·西베를린의 도시 외관상의 차이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점차 희박해지는 과정에 있었음.

o 독일인들의 統一에 대한 정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東獨地域의 신속한 경제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었음. 西베를린 출신의 택시기사 2명 모두 통일을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아무런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음.

o 舊東獨은 改革의 방향을 지도해주고 제반지원을 아끼지 않는 형제(서독)를 두고 있어서 迅速하게 발전할 수 있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며 東歐國家들은 모두 부러워하고 있으며, 장차 1995년 駐獨 蘇軍이 완전철수하고 나면 통일독일국가의 힘은 유럽에서 더욱 막강한 위치를 점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음.

4. 체코·슬로바키아 分離 獨立現況

가. 체코外務部 슬로바키아擔當局長 面談

o 일시 : 1993. 6.16, 11:00 - 12:00
o 장소 : 체코외무부 접견실
o 참석 : 체코외무부 슬로바키아담당국장(Vilem Holan박사) 제2정책관, 주체코한국대사관 1등서기관 이상학

o 원래 체코슬로바키아는 1918년 1차대전 종료후 戰後處理 과정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帝國을 해체하면서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으로 탄생함.

- 나치점령시대(1939-1945)에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분리·독립시킴

- 다시 1945년 2차대전말기 나치가 물러감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을 재수립, 이때 소련군의 프라하 입성(1945.5)에 따라 공산당 입지가 강화되어 무혈혁명으로 공산당독재가 시작됨.

o 1989년 1월 공산정권에 항거하는 대규모 反體制·反政府 示威가 발생, Havel 現 大統領이 이끄는 Civic Forum이 탄생함에 따라 Husak 大統領이 辭任하고 憲法을 개정함.

- '92년 7월 슬로바키아 의회가 主權宣言을 함에 따라 체코聯邦共和國과의 聯邦制 정부가 분리되어 1993년 1월 1일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각각 獨立國家를 수립함. (1.15 Havel 체코대통령 당선, 2.15 Kovac 슬로바키아 대통령 당선)

o 체코共和國과 슬로바키아共和國間의 분리독립은 양측 정부의 합의를 통한 총 40個 條約(합의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25개 조약은 分離 以前에, 15개 조약은 分離以後의 협상에 따라 합의됨. 현재 양국간의 分離獨立에 따른 문제는 兩國 共同所有 財産權 분할문제가 협상중에 있음.

o 체코 民族과 슬로바키아 民族의 言語는 거의 비슷하지만 種族은 서로 다르며, 역사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기간이 더 많았음. 또한 체코지역은 보다 産業化된 지역이어서 農業地域인 슬로바키아 지역에 비해 所得水準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2차 대전후 蘇聯에 의해 강제 병합된 체코슬로바키아 聯邦政府는 共産黨獨裁 정권 해체후 자유화와 개혁과정에서 분리될 수 밖에 없게됨.

o 分離獨立에 따른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거의 없으며, 체코 주민은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슬로바키아 주민들은 50%정도 찬성하고 있음. 새로운 민족주의와 經濟戰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經濟的 負擔地域(슬로바키아)과의 분리가 불가피했다고 판단함.

o 지난해 6월 체코정부 보건성직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음. 부부동반으로 1달간 체류하는 동안, 北韓政府 保健部 當局者들과 몇차례 만났으나, 保安때문인지 통역없으면 전혀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 북한관리와의 협의가 어려웠음.

또 호텔방의 잠금장치가 문밖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外部에 언제나 開放된 상태에서 불안을 느낀 나머지, 취침시엔 유리컵을 의자팔걸이의 모서리에 얹어 놓아, 예측불허의 침입자를 경계했었음. 묘한 국가라고 생각함.

o 統一이 무리없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장차 南北韓 통일에 도움이 된다면 협조를 아끼지 않겠음.

5. 建議事項

o 한반도 統一問題에 가장 많은 參考資料를 제공하고 있는 獨逸統合 과정은 아직 종료하지 않았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음.
실제로 現地視察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생생한 자료와 情報는 서울에서 간접적으로 받아보는 간접적 情報資料와는 적지않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특히 統一政策 專門家들에게는 獨逸統一의 現場踏査 기회가 보다 많이 주어져야 할 것임.

o 또한 열강들의 勢力均衡을 의식해야 하는 東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의 정부관리들은 國家管理體系나 『民族의 生存과 繁榮』을 위한 政策모델을 미국보다는 유럽國家들 특히 독일로부터 많은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함.

o 특히 유럽의 가장 막강한 국가인 독일의 우수한 國家管理體系는 新韓國 創造를 위해 改革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가 배워야 할 많은 장점들을 지니고 있는바, 國力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법을

① 노동에 대한 철학과 분배의 정의 확립

② 양질의 인력 배양과 효율성 극대화라고 볼 때,

독일의 敎育制度나 人力管理制度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원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간단한 예를들어, 독일주민의 신생아 출산시 독일정부가 지급하는 1만 마르크의 양육보조금은 유럽의 어느 민족보다 강력하고 우수한 게르만 인종을 유지·보존케 하는 장기적 안목의 정부정책인 것임.

o 독일통일은 혁명적 상황의 政治次元에서의 문제였지만, 실제 統合過程은 독일 實定法에 의거한 지극히 合法的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없었던 것임.

o 독일통일은 결국 第1次 東·西獨 統合條約(경제·사회통합)과 第2次 東·西獨 統合條約(정치·정부통합)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중에서 제2차 조약의 附屬議定書는 東·西獨 地域에 적용할 각종 法規問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장차 韓半島 統一政策 樹立에 유용한 실증적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염돈재公使)

독일어版으로 공개된 이 자료를 연차적으로 번역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년부터 민족통일연구원 주관으로 동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독일통일문제 현황

1993. 6

목 차

1.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 ····· 27

2. 통일을 위한 서독정부의 노력 ····· 30

3. 통독이후 제기된 주요 문제점 ····· 36

4. 통일독일 정부의 대처 방안 ····· 42

5. 향후 전망 ····· 50

1.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

가. 우월한 서독체제의 강한 흡인력

- o 의회민주주의와 다원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체제의 정치적인 우월성
- o 사회적 시장경제제도의 정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과 모범적 복지국가 실현
- o 더많은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서독사회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동경

나. 동독 국가사회주의적 독재체제의 붕괴 및 동독주민의 서독편입 결정

- o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실패로 70년대 이후 경제침체 계속
  - 생산성 저하, 근로의욕 상실
- o 독재적 장기집권에 따른 정권의 경직화로 주변정세 변화에 적응 거부
  - 동구권의 탈공산화 및 개혁추세가 동독으로 파급
- o 아래로부터 체제개혁 운동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자각과 대규모 이주사태
  - 보안기관 (Stasi)을 통한 조직적 탄압에 대항하는 체제 저항세력 생성
  - 일반국민은 자유롭고 풍요한 서독체제를 동경, 자체개혁보다 서독 편입 선호

다. 서독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정책과 민족 동질성 유지 노력

o 기본법에 명시된 민족재통일 명제를 포기하지 않은 채 현실적인 관점에서 통일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가능한 정책 추진

- '작은 걸음 정책' (Politik der Kleinen Schritte)이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
- "현상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현상을 인정해야 한다"(에곤 바)라는 명제에 따라 통일을 일회적 행위가 아닌 장기적인 질적 전환과정으로 파악

o 꾸준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대서독 접촉에 대한 동독측의 의구심을 해소하면서 궁극적으로 동독 스스로가 변하도록 유도

- 동독지도부를 자극하지 않으며, 분단으로 고통을 받는 동독주민을 돕기 위해 경제적 지원
- 동독주민이 서독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 마련

o 동독이라는 국가의 존재는 인정하나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임을 강조

라. 고르바쵸프의 등장에 따른 소련의 대동구 정책 변화

0 브레즈네프 독트린 폐기로 동독에 대한 패권전략 포기

0 헝가리 국경개방과 고르바쵸프의 동독개혁 요구가 평화혁명의 기폭제

마. 서독의 기민한 외교역량 발휘 및 미국의 적극적인 통독 지원

0 전후 유럽에서 냉전을 최종적으로 청산하는 독일통일이 새로운 유럽질서 형성에 유리하다는 인식 확산

- 서독측은 독일통일을 범유럽 통합의 주도변수로 활용

0 서독측은 효과적인 통일외교 (2 + 4 회담)를 전개, 주변국의 의구심 해소

- 서독의 국력과 미국의 지원이 영·불·소의 반대를 사전 봉쇄

- 통일독일의 NATO 잔류에 대한 소련측의 양보 유도

2. 통일을 위한 서독정부의 노력

가. 제 1단계 ('45~'62): '힘에 의한 우위 정책' (Politik der Staerke) 추진

o 서독에 의한 동독병합을 겨냥하며 연합국과 유엔 감시하의 전독 총선 실시 주장
  - 소련을 비롯한 동독 반대, 동독측은 공존을 지향하는 국가연합안 제안

o 내독간 무역 개시 ('51 베를린 협정)
  - 대공산권 수출금지 품목을 제외하고 무역 자유화
  - 내독무역은 내부거래로 간주, 관세 면제
  - 중앙은행간 청산계정 설치, 동독에 무이자 신용대부 (Swing) 제공
  - 무역량은 150억 VE (80년대 평균)로 서독은 동독의 제 2 무역상대국, 동독은 서독의 15위 무역상대국이었음.
  - 내독간 교역 및 재정지원을 통해 서독이 동독에 지불한 금액: 총 244억 DM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연방은행 추계)

o 서독의 적극적인 친서방정책
  - 독일조약 ('52)으로 서방 3국으로부터 주권 회복
  - NATO 가입 ('55)으로 대동구 안보 강화

o 독일전체에 대한 유일대표권 주장, 철저한 반공정책

- 할슈타인 원칙 ('55)으로 동독의 외교적 고립정책 추구
- 공산당 불법화 ('56)

o 향후 서독의 경제부흥과 민주주의 정착의 기틀 마련

- 대동독 우위확보를 위한 체제역량 강화

나. 제 2단계 ('63~'70): 대동구 화해정책 추진

o 할슈타인 원칙을 수정, 우선 동구권 국가와 경제협력 강화 · 국교수립

- 베를린장벽 설치 이후 분단이 장기화되고, 힘에 의한 강경책만으로는 주민들의 분단고통이 완화될 수 없다고 판단

o 양독간 '작은 걸음 정책' (Politik der Kleinen Schritte) 시작

- 동·서 베를린간 통과사증 협정 ('63)

o 동독내 정치범 석방과 이산가족 합류를 위한 거래 시작 ('64)

- 주로 체제저항 세력으로서 중형을 받은 자의 서독 인도조건으로 몸값을 지불 (상당하는 물품 제공)
  - 3만 3천명 정치범 석방, 서독측에 인도
  - 25만명의 이산가족 재회
  - 서독측은 이에 대해 동독측에 총 35억 DM 지불

다. 제 3단계 ('70~'74): 양독간 협상을 통한 교류·협력의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

o 제 1차 정상회담 ('70.3), 제2차 정상회담 ('70.5)

- 양측의 상호입장 차이만을 확인하고 끝났으나, 협상지속의 계기 마련

o 동·서독 통행협정 체결 ('72.5)

- 동독측으로부터 인적교류 제한조치 완화 보장

※ 인적교류 현황

- 합법이주 또는 탈출을 통한 완전 거주이전 ('50~'92)
  - 동독에서 서독으로 : 375만
  - 서독에서 동독으로 : 47만
- 동독에서 서독으로 여행 : 200만 (80년대 후반 매년 평균)
- 서독에서 동독으로 여행 : 600만 (80년대 후반 매년 평균)

o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72.12)

- 양독간의 기본관계 규율, 후속협정 체결을 위한 기본 장전

o 신문·방송사 특파원들의 상호 취재활동 허용 ('73.3)

- 서독언론인 동독에 취재등록 및 상주 ('88년말 20명의 서독특파원, 8명의 동독특파원)

o 상주대표부 설치 ('74.5) : 양독간 분쟁해결기구, 협상창구 마련

라. 제 4단계 ('74~'89): 각 분야별 후속조약 체결을 통한 주민들간의 접촉 증대

o 양독간 체육협정 체결 ('74.5)

- 정기적으로 체육경기 개최 합의, 경기일정 작성 교환 ('88년 141회 개최)

o 양독간 보건협정 체결 ('74.6)

- 양측의 여행·방문자들이 긴급한 질병 발생시 상대편 지역에서 무료 치료 제공

o 양독간 우편·전화 협정 체결 ('76.3)

- 양독간 우편물 교환 및 전화통화 현황
  - · 소포 왕래 ('88) : 연간 3,600만건
  - · 편지 왕래 ('88) : 연간 1억 9,500만건
  - · 전화 회선 ('88) : 1,529선
  - · 전화 통화 ('88) : 연간 3,900만 통화

o 양독간 청소년교류 합의 ('82.9)

- 정부지원 수학여행 장려
  - · 동독에서 서독으로 여행 ('88) : 연간 5,500명
  - · 서독에서 동독으로 여행 ('88) : 연간 74,000명

o 양독간 문화협정 체결 ('86.5)

- 도서전시회 개최, 상업적 음악공연 유치
  · 연극 순회공연, 학술회의, TV 프로그램 교환방송, 소장 문화재 교환 전시

o 양독 도시간 최초 자매결연 ('86.10)

- 지방자치단체 주민간 상호방문을 통한 접촉 증대
  · 62개 동·서독 도시간 자매결연 ('89말까지)

o 양독간 환경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87.9)

- 환경오염 제거를 위한 경험·기술정보 교환

o 양독간 과학·기술 협정 체결 ('87.9)

- 서독 과학·기술자 협회와 동독 과학 아카데미간 학문교환, 공동연구, 학술회의 개최
- 자연과학, 공학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합의 (27건)

마. 제5단계 ('89~'90): 통일의 구체화

o 콜 수상 10개 조항 통일방안 발표 ('89.11.28)

- 구체적 대동독 지원책 발표, 통독기반 마련

o 동독에서의 첫 민주총선 실시 ('90.3.18)

- 각 정당 민주세력 지원

o 독일통일기금 (Fonds Deutsche Einheit) 조성 ('90.5.16)

- 통독비용 보전: 1,150억 DM

o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1차 국가조약 체결 ('90.5.18)

- 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기틀 마련

o 통독 총선을 위한 선거협약 체결 ('90.8.22)

- 최초의 통독총선 방식 합의

o 동독의회, 서독에의 편입 결의 ('90.8.23)

- 기본법 23조에 의한 10.3 서독에의 편입

o 통일조약 (제2차 국가조약) 체결 ('90.8.31)

- 모든 분야에 걸친 양독관계 통합을 위한 최종 법적 구체화

o 90.10.3 독일 통일

3. 통독이후 제기된 주요 문제점

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재편에 따라 구동독지역 경제붕괴 불가피

○ 구동독지역의 경제규모 (92년말 현재)

- 면적 : 전체독일의 30%
- 인구 : 전체독일의 21%
- GNP : 전체독일의 8.2%
- 취업인구 : 전체독일의 18%
- 1인당 노동생산성 : 구서독지역 대비 34%

○ 구 동·서독 지역 주요 경제지표 비교

	구 서 독 지 역			구 동 독 지 역			독 일 전 체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GNP (십억 DM)	2,631	2,775	2,832	195.4	246.9	292.5	2,826	3,022	3,125
경제성장율(%)	3.7	1.5	-2.0	-31.4	6.8	5.5	0.6	2.0	-1.5
취업인구(천명)	29,219	29,450	28,975	7,179	6,341	6,100	36,398	35,791	35,075
실업자 (천명)	1,689	1,808	2,300	913	1,170	1,250	2,602	2,978	3,550
실업율 (%)	5.5	5.8	7.5	10.9	14.9	16.5	6.7	7.7	9.2
소비자물가 상승율 (%)	3.8	4.1	4.0	12.8	9.9	8.5	4.8	4.7	4.5

※ 독일경제연구소 (DIW) 제공자료, 1993년은 추정치임.

o 서방기업과 경쟁력있는 업종 거의 부재

o COMECON 국가들의 수주 격감 등 구동독기업 상품시장 상실

o 서방기업의 투자 부진

- 토지·건물의 법적 소유관계 미확정, 행정체계 미흡, 사회간접자본시설 미비

o 구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 장애 요소

- 환경정화 대체비용, 막대한 구채무 존재

o 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노동생산성 향상보다 더 높은 임금인상 요구

	통독 당시	'92	비고
노동자 1인당 1시간 임금	12.2 DM	21.1 DM	72% 상승
노동자 1인당 생산성	18.6 DM	19.1 DM	3% 상승

나. 실업 문제

o 구동독에서는 실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당면 실업자 불안

o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속성상 은폐된 실업자가 많기때문에 시장경제로의 기업구조 전면개편에 따라 당분간 실업증가 불가피

o 구동독지역에서 구서독지역으로 유경험자·전문인력 이주

- 통독이후 매년 17만 정도

o 통독전후 실업 현황

	실 업 자		단축조업자		실업률(%)	
	서독	동독	서독	동독	서독	동독
통독 당시	160만	50만	3만	170만	6.5	6.1
통독 1년후	160만	100만	17만	120만	6.0	11.9
통독 2년후	180만	120만	23만	52만	6.0	14.4
'92년말	203만	110만	65만	23만	6.6	13.5
'93년 4월말	220만	118만	104만	23만	7.1	14.7

다. 재정적자 가중, 구동독지역 5개주 재정난

o 2,000년까지 10년 동안 통일비용 소요액: 약 2조 DM

- 구동독 부채 인수 등 직접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 3,700억 DM (18%)
- 구동독 재건비용: 1조 6,400억 DM (82%)

o 구동독 재건을 위한 막대한 재정지원 (수상실 통계)

- '90. 975억 DM, '91. 1,400억 DM, '92. 1,520억 DM,
  '93. 1,830억 DM (예정)

o 구동독지역 주정부·지방자치단체 세입 격감

- 기업도산으로 법인세 세수 부진
- 국유재산 사유화 부진으로 재산세 세수 부진
- 세무행정체계 미확립으로 세원 포착 미흡

라. 소유·재산권 반환 문제

o 미해결 재산권 문제가 구동독지역 경제의 조속한 재건의 주요 장애요소

o '45~'48(소련점령하) 토지개혁에 의한 몰수재산은 통일조약에 의거 미반환, 보상만 이루어짐.

o '49 이후 몰수된 재산은 이전 소유자가 반환신청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하나, 공공의 투자목적을 위해서는 예외 인정

마. 환경오염 제거 문제

o 구동독정부는 단기적 성장·할당량 달성에 급급, 환경문제 경시

o 국제적인 환경보호기술과 경험교환 부재, 갈탄사용으로 환경오염 가중

o 서독수준으로의 동독지역 환경정화시설 개선에 2,000억 DM 소요

바. 동·서독간 심리적 이질성 극복 문제

o 통독이후 심리적 상호 이질감 상존 ('93.1 Allensbach 여론조사)

- 서독주민의 44% ('90.10월, 34%), 동독주민의 50% ('90.10월, 38%)가 서로 이질감을 느낌

o '경쟁사회'와 '하향적 평준화 사회'간의 과도기적 갈등 심각

- 동독주민의 시장경제체제, 개방적·다원적 사회에 대한 적응과정 필요
- 서독 위주의 급속한 통합추진으로 서독인의 우월감, 동독인의 열등감에서 오는 위화감 해소문제 대두
  - 동독주민의 86%가 2등 국민이란 차별의식을 느낌 ('91.2.4 Spiegel 여론조사)
  - 동독주민의 60%가 '독일인'이라기 보다는 '동독인'으로 느낌 ('93.1 Allensbach 여론조사)

o 실업으로 물질적인 생활기반과 자아실현의 토대 상실로 자기 비하·고뇌

사. 행정·사법·군사통합에 따른 문제

o 구동독 공공기관 종사자 인력감축

- Stasi 및 공산당 활동자, 반인권·법치적 행위자, 전문지식 결핍자 등 대상

o 동독지역 주정부 이하 지방행정 인력 부족

o 대국민 법률보호의 공백

- 동독지역 판·검사 대부분이 과거 전력과 관련 심사 중

o 독일연방군 감군 (94년까지 37만)에 따른 사회복지, 새로운 직장선택 문제, 잔류 인민군의 통합연방군에 동화 문제

아. 교육통합에 따른 문제

o 동·서독 지역간 교육제도 동일화 및 교육시설 격차해소 문제

o 구체적 관련 교사, 학술·연구분야 종사자 청산 진통

o 교사들의 이념중심 교육 탈피 및 자질 향상

자. 구동독체제 과거청산 문제

o 구동독 치하 피해자 복권·보상 문제

- 약 10만명으로 추정되는 구체제 피해자가 구동독 법원에 복권 및 보상을 신청

o 반법치국가적 가해자 처벌문제

- 사법체계 미확립으로 정치적 폭력사례에 대한 형사소추 지연

4. 통일독일정부의 대처 방안

가. 적극적인 구동독 경기부양책 마련

o '구동독 경기부양을 위한 공동대응책' (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 마련 ('91.3.8)

- 연방정부, 주정부, 경제계, 노조 응급 공동대응책
- '91~'92동안 240억 투입, 사회간접시설·실업문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o 특별감가상각, 투자보조금 지급 등 투자유인 조치를 통해 구동독지역에 대한 기업신설 적극 장려

o 투자촉진을 위한 관련 입법 제정·정비

- '기업사유화에 있어서 장애제거와 투자촉진에 관한 법' 제정('91.3)으로 미해결재산 원소유자 반환원칙에 광범위한 예외 인정
- 동독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 조기확충을 위한 특례법 마련, 기존 건축법, 설계법 등에 규정된 행정절차 간소화

나. 실업 및 사회보장대책 마련

0 고용촉진 대책 마련

-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주택건설 등 고용효과가 큰 공공사업 조기발주

0 전직·자질향상 훈련 실시

- 유휴 노동력은 많으나 장래가 없는 조선업, 광업, 전자산업, 화공업 분야 집중
-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요구되는 직능개발 훈련 실시

0 서독 사회보장체계의 동독 확대

- 대등한 의료·보건 혜택 부여를 위해 의료보험기관에 국가보조
- 연금액 인상을 통한 연금생활자 격차 해소
  - '93.7.1 부터 구서독 수준의 73% ('90.7.1 당시는 67%)

0 노사간 임금협약체결을 통한 동·서독 노동자 임금 격차 해소

- 통독당시 구동독의 임금수준은 서독의 60% 수준이었으나 단계적으로 인상
- 공공노조: '92.12.1부터 74% / 금속노조: '93.12.1부터 80%

다.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o 독일통일기금 : '94에는 완전 소진

- 당초 1,150억 DM에서 1,607억 DM으로 증액

o 세금인상

- 한시적으로 소득세 7.5% 추가부과, 석유세, 담배세, 보험세 인상
- 2명의 자녀를 가진 월소득 5,000 DM 가정의 경우 월 83 DM 정도 추가 부담

o 적자재정 운용

- 연방정부차입금은 '91년 660억 DM, '92년 453억 DM으로 통일이전 3년간 평균액 337억 DM을 100% ('91년 기준) 상회
- 공공부문 적자 (연방정부, 주정부, 신탁청, 연방철도, 연방우편 등) 누계액이 '95년에는 2조 2천억 DM에 이를 전망

연도별 공공부문 적자 누계액

단위: 10억 DM

연도	'89	'90	'91	'92
누계액	1,039	1,171	1,300	1,600 (잠정)

0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억제를 통한 예산절감

- 최근 '연대협약'을 통해 정부재정긴축방안 마련

0 논의 중인 향후 통독비용 조달 방안

- 집권연정은 '95년 이후 세금인상을 당론으로 확정
- 각종 공채발행, 특별부과금, 고속도로 사용료 등 도입 검토
- 통독으로 이득을 누린 계층으로부터 연대기여금을 징수하는 방안 검토
  - 이전 몰수재산을 반환받는 사람 등을 대상

※ 연대협약 (Solidarpakt) 체결: '93 상반기내 완료 추진

- '94년말 독일통일기금과 신탁청의 해체로 이를 대체할 재정조달 수단 마련 필요성 대두
- '93.3.13 연방정부, 16개 주정부 및 여·야 정당대표들 간에 연대협약의 일환으로 연방재정건실화를 위한 10개 원칙에 합의
  - '95년부터 임금·소득세에 대한 7.5% 추가 연대부과금 재도입
  - 사회보장혜택 남용 방지 및 정부지출 삭감
  - 주택분야 과거부채 해소를 위해 '구채무변제기금' 설치

라. 소유·재산권 문제 처리

o 연방과 각 주에 미해결 재산권 처리 관청을 설치, 반환되는 재산의 소유권 확정

- '93.3월 말 현재 119만 명이 259만 건의 재산권 반환신청을 했으며, 그 중 23.45% 해결

o '93.3.31 연방각의, 과거 몰수재산 보상에 관한 법안 의결

- 보상법, 보상기금법, 재산특별 부과금법, 실향민 지원법 등으로 구성, 보상액은 1935년 시가를 기준 재산종류별로 상이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
- 총 125억 DM의 보상기금 마련

o 49년 이후 몰수재산권은 반환 원칙임에도 불구, 구동독지역 투자 촉진을 위해 신탁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대 또는 매각될 수 있음.

마. 구동독지역 환경재건

o 이미 조사된 12,250개 구오염 잔재부담지역 중 심각한 196개 지역 우선 정화 실시

o 환경정화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 환경정화 국제전시회 개최, 특수폐기물 적치장 건립, 강유역 정수 시설 27개 긴급 건설

o 폐기물·탄산가스 특별부과금 징수(예정), 환경정화인력 자질 향상

o 환경오염 잔재 해소 재원 마련을 위해 연방정부와 구동독 주정부간 행정협약 합의 ('92.12)

- 환경오염 처리비용은 연방 (신탁청) 60: 신설주 40으로 분담
- 화학공장, 갈탄광산 대형사업의 경우 75:25로 처리 비용 분담

바. 체제전환에 따르는 동독주민의 의식구조·생활양식 재정비

o 민주주의적·법치국가적 정치교육 강화

- 주요 대상: 군인, 공무원,교사, 언론인, 노조간부 등
- 정치교육기관: 연방내무성, 연방 및 주정부 정치교육센타, 각정당 학술재단, 대학, 연구기관, 종교·사회단체

o 동·서독 지역간 상호접촉과 이해 도모

- 기존 도시간 자매결연을 이용 상호 친선·교제

o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이해·기능 집단의 활성화

사. 능률적인 지방행정체계 구축

o 서독지역 공무원 동독지역 파견·전보 ('93년 1월 현재 총 34,354명)

- 봉급과 승진상의 특혜 부여
- 퇴직 공무원들 한시적 연장 근무

o 기존 동독 공무원 직업훈련, 자질향상 교육 강화

아. 법치국가적 사법체계 확립

o 과거 동독지역 판·검사 심사, 선발

- 각 주정부마다 법관 선출위원회 및 검사 임용위원회 설치
  - 재임용 현황 ('93.1): 판사 1,493명중 628명 (42%)
    검사 1,237명중 378명 (30.5%)

o 서독지역 법관·검사 동독지역 파견·전보

- 판사 700명, 검사 225명

자. 구체제 잔재 청산으로 화해 도모

o 피해자 복권·보상을 위한 '제1차 구동독 불법행위 청산법' 마련 ('92.11.4 발효)

- 정치적인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구금일 당 보상비 계상 및 판결무효화 신청권 부여
  - '93.2.10 연방각의에서 반법치국가적 행정결정과 직업상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법 의결, 현재 연방하원에서 심의 중
-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선언 (연방하원)

o 정치적 이유로 폭력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형사소추 방침

- 과거 국경탈출자에 대한 사살행위, RAF 테러조직 방조행위, 대서독 스파이활동 등에 대한 책임자 우선 형사소추
  - 베를린검찰 '정권적 범죄행위' 수사 임시전담반 편성
- 호네커 (구동독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원수) 구속, 재판 회부
  - 장벽탈출자 살인죄 적용
  - 건강 악화로 재판 진행 불가, '93. 1. 12 석방 (칠레 체류 중)

- 국경탈출자에 대한 사살과 관련된 전 Stasi (국가보위부) 부장 밀케를 비롯한 정치국원들에 대한 재판 진행 중
- 전 Stasi 대서독 스파이 총책 마르쿠스 볼프 (Markus Wolf) 재판 진행 중

o Stasi 자료법 제정

- 정보사찰에 의한 피해자들 자신관련자료 열람 허용 및 조회권 보장
- 3,000명의 Stasi 자료담당청 직원 확보,
  약 140만건의 자료열람 및 심사 신청 처리 중

5. 향후 전망

o 독일정부와 국민은 법적·국가적 통일 이후 내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

- 양독 지역간 경제적·사회적·문화적·환경적 생활수준의 평준화 (과거 서독에서 가장 못사는 주 정도 수준으로 동독지역 신설주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표) 추진

0 40년에 걸친 권위주의적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및 사회복지적 시장경제 체제에로의 구조전환이 마찰없이 진행될 수 없음.

- 평화로운 체제이행에 관한 인류역사상 축적된 경험이 없음.
- 통독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동독경제는 더욱 취약했으며, 주민들의 심리에 사회주의적 독소가 남아 있음.

0 정치적으로는 보수 여당 (기민당/ 자민당)의 지지도가 통독 당시에 비해 떨어지고, 제도권 정당들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극우파들이 대두하고 있으나, 지난 40여년간 정착해 온 서독 의회민주주의 하의 정치적인 안정기조는 흔들리지 않고 있음.

- 각 정당별 지지도

단위 : %

	기민 · 기사당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B 90	민사당 (공산당후신)	공화당 (극우파)
'90.12	43.8	33.5	11	5	2.4	2.1
'93. 4	33.1	35.2	9.7	11.1	2.9	6.8

- 구동독지역의 행정·사법 체계 확립은 아직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있으나, 구서독지역으로부터 지원에 힘입어 2 ~ 3년이면 완전히 확립될 것으로 보임.

-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민주주의체제로의 동화과정은 구동독지역의 경제·사회적인 문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결되어가느냐에 달려 있음.

o 경제적으로는 최근 독일의 경제침체, 통독이후 재정적자 가중 ('93년 680억 DM 예상), 실업자 증가, 물가상승 등 어려움이 있음.

- 구동독 경제재건의 견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구서독지역 경제는 이제까지 통독에 따른 특수를 누려왔으나, '93에는 성장율이 전년도에 비해 3.5% 떨어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실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몇차례 독일연방은행의 금리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음.

※ '93 주요 경기 지표별 전망

지 표	서 독	동 독
GDP 성장	-2.0%	5.5%
정규실업자수 (백만)	2.3 ('92년 대비 50만 증가)	1.25 (8만 증가)
실업률	7.5%	16.5%
물가상승률	4.0%	8.5%

통독직후에는 구서독 수준으로의 구동독지역의 경제재건이 3~4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콜 수상이 제시한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으나, 경제재건에 필요한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 구동독 노동자들의 생산성 ('92말 현재 구서독 수준의 34%), 구동독 체제 재건에 필요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구동독 경제재건과 구동독 주민들의 사회복지보장에 따른 통독비용 조달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서독 지역간,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계층간 (노·사간) 비용의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노정되고 있음.

- '92말 현재 구동독지역은 전체 독일인구의 20%를 차지하면서도, 국민총생산(GNP) 부문에서는 8%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구서독지역 GNP 산출량의 5% 정도 (통독이후 연평균 1,500억 DM)가 매년 재정이전되어야 하는 형편임.

- 이러한 비용분담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연방과 주정부의 지출삭감, 기업가의 구동독지역 투자확대, 노동자측의 인금인상 자제를 촉구하는 모든 경제행위 주체간의 '연대협약' 체결이

시도되고 있으나, 최근 구동독 금속·철강 노조의 파업상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특히 노사간의 분배문제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0 구동독의 공산독재체제가 남긴 유산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환경잔재 정화문제와 심리적인 격차해소문제인데, 이의 해결에는 최소한 1세대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임.